

## 2026 화두는 다시 '환율'…

# 1500원까지 각오한 시장, '계산기' 두드리는 플레이어들

적자 재정, 낮은 성장율, 자본 유출 우려…구조적 수급 불균형  
CET1 비율 압박받는 은행 '비상등'…수출기업들 수익성 개선 체감  
느긋한 LP·민감한 GP…환율 효과 노린 인바운드 M&A 늘어날 듯

새해 자본시장의 화두가 다시 '원달러 환율의 향방'으로 모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원화·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낙관론에 무게를 실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평가다. '1 달러에 1500원'이 가시화하며,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물론,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투자업계까지 대응과 대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증권사 리서치들의 올해 원달러환율 전망치는 대체적으로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대 후반 사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에 대한 경계감은 점점 짙어지는 상황이다.

현재의 '고환율'을 초래한 수급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려감의 배경으로 꼽힌다.

내년에도 728조원의 사상 최대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 예정 규모 역시 사상 최대인 상황이다.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 부담도 여전하다.

KB증권은 "현재 환율 구간은 강력한 저항구간이나, 달러가 반등하거나 수급불균형이 확대된다면 추가 상승도 예상된다"며 "환율 하락을 위해선 제조업 업황 개선을 통한 성장을 제고와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짚었다.

**부담 가중 은행권, '생산적 금융'까지 타격…증권·보험도 자본 변수'**

'고환율'이 '뉴 노말'(새로운 기준)이 된 시대를 두고 이를 바라보는 '플레이어'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금융권은 원달러환율 상승 추세가 불편한 상황이다. 당장 은행들은 자본비율에 직접적인 부담을 받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이 확대되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는 구조다.

외화대출, 무역금융, 해외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영향이 크다. 업계에선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CET1이 약 2b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분기 말 환율(약 1400원) 대비 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이미 15~16bp의 CET1 하락 압력이 누적된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혁신기업 대출이나 장기 프로젝트 금융은 상대적으로 RWA 소모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고환율 장기화는 '생산적 금융'에도 부담 요인"이라며 "CET1 하락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책과 현장의 고민감이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조선·자동차 '웃고' 정유·항공 '울고'…고환율에 갈린 희비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환율 인식과 대응 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3년 전 급격한 환율 변동기에는 기업들이 환율 급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지만, 최근에는 일정 수준의 환율 변동을 전제로 사업과 투자 전략을 운용하는 데 익숙해진 분위기가 전해진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달러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달러 수입 구조를 가진 기업들 가운데서는 환율 상승의 실질적 수혜가 상당한 곳들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외화 기준 거래가 대부분인 조선사들은 원화 환산 매출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이고, 해외 판매가 많은 자동차 업종 역시 환차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면 원유를 전액 달러로 결제해 수입하는 정유사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석유제품 가격 하락에 이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다. 항공유, 리스료,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

중이 높은 비용 구조로 인해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 연기금들 '큰 영향 없다'…딜 시장 외국계 PEF발 '큰장' 설까 관심

고환율 상황은 연기금,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LP)들에게도 고민거리이긴 하다. 하지만 해외에 집중하겠다는 기본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이 크다 보니 오히려 환율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엿보인다.

국내 연기금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규모만 놓고 봐도 해외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투자를 더 선호하고, 국내 투자는 밸런싱 차원에서 일부를 하는 것"이라며 "환율의 변동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LP들의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환율 자체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환율 때문에 투자 기조에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다보니 환율이 올라도 평가금액도 올라가 단기적으로 부담은 적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운용사(GP)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고환율발(發) 경쟁 강도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해외 자본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환율 효과를 노리는 외국계 PEF들의 랜드마크 M&A 거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단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달러를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한 해외 PEF 운용사들에 한국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업들은 사실상 연중 '비겐세일'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같은 매물을 두고 경쟁하는 우리나라 PEF운용사보다 입찰에서 더 높은 가격을 써낼 여력이 증가했단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연초 대기업 자금조달 트렌드는?…

## AA급 차환과 메자닌 우세

1월 수요예측 앞둔 21곳中 AA급만 17곳  
깐깐한 유증 심사에 메자닌 '대안' 부상  
"조달 여건 따라 기업 간 양극화 심화"

연초 대기업 자금조달 시장은 AA급 회사채 차환 발행이 이끌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만기를 앞둔 우량 기업들이 보수적인 조달 전략을 택하는 분위기다. 유상증자에 대한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연계채권(메자닌)을 통한 우회 조달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AA등급이 연초 발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AA급 회사채 규모만 16조36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4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21조9560억원 수준이다. 금리 부담이 여전하지만, 만기를 앞둔 기업들로서는 차환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1월 중 공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운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AA), 롯데월풀드(AA), 포스코퓨처엠(AA-), 한화투자증권(AA-), 이마트(AA-), 현대제철(AA), 한진(BBB+), 한솔케미칼(A+), KB증권(AA+), CJ제일제당(AA), 신세계(AA), 키움증권(AA-), 대상(AA-), 코리아에너지터미널(AA-), 현대건설(AA-), 팜한농(A), 신세계푸드(A+), SK가스(AA-), LX하우시스(A+), 연합자산관리(AA), CJ대한통운(AA-) 등이다. 총 21곳 가운데 AA급 발행사가 17곳에 달한다.

A등급 회사채의 만기는 오는 3월(2조5070억원)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다만 종합투자계좌(IMA) 도입 기대, 신규 발행어음 북 편입 등 수급 여건 개선 요인이 거론되면서 일부 기업은 선제적 차환 발행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A증권사 채권자본시장(DCM) 헤드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워낙 좋고 금리 불확실성도 크다 보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공모채 발행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 월별 회사채 만기 도래액



라며 "7일 예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요예측에서 대형 딜의 수요와 금리 수준을 확인한 뒤 회사채 조달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B증권사 DCM 헤드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조달할지 말지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며 "지금 발행에 나서는 곳 중에서는 오히려 자금 여력이 빠듯한 경우도 간혹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역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2.4%대를 오르내리다 지난달엔 3.1%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소폭 하락해 6일 종가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949%, 회사채 3년물 AA-등급 금리는 3.445%로 집계됐다.

앞의 관계자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니 부담은 크지만, 만기 도래액을 감안했을 때 결국 발행을 안 할 수 없다"며 "매년 반복되는 학습효과처럼 1월에 조달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많아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메자닌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기업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 연초임을 감안했을 때 아직 메자닌 시장에서 뚜렷한 발행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환사채(EB) 과열이 진정되고 전환사채(CB) 중심의 실수요와 유상증자 대체 수요가 결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C증권사 DCM 헤드는 "메자닌은 국민성장펀드, 모험자본 등 정책 관련 자금 흐름이 본격화하는 2~3월 이후에야 조달 관련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A증권사 헤드는 "오버슈팅 논란이 없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프리미엄을 제시할 수 있다면 메자닌도 자사주 소각 방식이 아니라 신주 조달 방식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발행사 입장에서도 유상증자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우회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유상증자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엄격한 증권신고서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는 유상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이다.

반도체, 방산, 전력, 조선,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대규모 투자 사이클에 진입한 산업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차전지, 석유화학, 건설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에서도 재무 구조 개선 목적의 유상증자 수요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D증권사 DCM 헤드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조 아래 유상증자 목적의 합리성, 기준 주주 회석 정도, 최대 주주 지분을 변화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조달 여건에 따라 기업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 노란봉투법 걱정으로 새해 시작... 구조조정 급한 차화정 기업들 골머리

법 시행도 전부터 원청에 성과급 협상 요구하는 하청노조  
인건비 인상 압박 커질 텐데 쟁의 대상도 광범위해질 전망  
완성차 생태계 막형 현대차, 인력대체가 장기 먹거리인데  
정부에 구조조정 결과 내놔야 하는 정유·석화 업체도 걱정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이 벌써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인 만큼 재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투자업계에선 앞으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완성차·석유화학·정유 산업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내놓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부 해석기준의 주요 대목은 ▲원청이 하청 사업주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벌써 각계에서 잡음이 불거진다. 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가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행정예고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자체는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찌감치 전문이 감돈다. 지난 12일만 해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에 성과급을 올려달라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짜 사장은 현대차”라 주장하면서 사실상 성과급 교섭에 나선 것이다. 직전에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 성과급 비율을 원청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발표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한화오션 발표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바람직한 자세”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법 시행도 전부터 개정 내용에 부합하는 판시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당장 주목을 받는 것은 현대차그룹이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산업일수록 기존 노사 역학관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건설이나 조선업도 있지만 완성차 생태계가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다. 막형 격인 현대차는 구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협력사 수만 8500개에 달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3월 이후로 원청-하청 통째로 임금교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처럼 후방 고용 규모가 큰 제조 대기업들은 인건비 인상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4대 그룹사가 전면에 나서 정부로부터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된다”라고 전했다.

회사가 상대해야 하는 근로자 범위가 하청 전반으로 넓어지는 문제도 작지 않지만 쟁의 대상이 광범위해지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발표된 노동부 지침 자체는 해외투자나 인수합병(M&A), 사업 양도·재편 등 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 결과로 근로조건이 조정될 경우에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범위를 명확히 나눌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많다.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이 예상되는 경영상 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노조가 선제적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현대차처럼 해외 생산기지 확장과 전동·자동화 전환이 숙명인 기업의 경우 경영 판단 길목마다 갈등비용이 곱절로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목표인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나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등 사업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력 대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하청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할수록 전환 속도를 끌어올릴 개연도 커진다.

증권사 한 리서치센터장은 “현대차가 피지컬(제조) AI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정도가 아니라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 방향이 잡혀 있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 이전에도 해외 투자나 생산라인 운용에 노조가 실력을 행사해왔는데 법이 시행되고 나면 강도가 더 세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치러야 하는 정유·석화 기업들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자체가 납사분해설비(NCC) 생산능력 370만톤 감축인데, 해고 없는 감축이 불가능한 탓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NCC 대부분은 10개 정유·석화 기업이 오래 굴려온 노후 설비들이다. 구형 NCC의 경우 생산능력 대비 투입 인력 규모가 크기도 하고, 범용 외 다운스트림이나 스페셜티 사업 연계가 떨어져 전환 배치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구조조정 최일선으로 분류되는 여수 산업단지에선 작년부터 대량실직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인력을 그대로 두고 설비만 줄이는 등의 절충 안도 거론되지만 구조조정 효과 회석이 불가피하다.

정낙영 기자

2026

# 금융지주 너도나도 조직개편… 방점은 ‘생산적금융’과 ‘소비자보호’

정책 순응 넘어 수익구조 전환 시험대  
기업금융·감독 리스크가 성과 가른다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새해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겉으로 드러난 새해 경영 화두는 ‘생산적금융’과 ‘소비자보호’다.

표면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성격이 짙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금융지주 스스로가 직면한 수익구조 전환의 압박과 감독 리스크 관리가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의 공통점은 부동산·가계대출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업대출·투자금융(CIB)으로 자금 흐름을 옮기되, 동시에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리스크를 통제할 내부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책 대응과 수익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은 정보보호와 생산적금융을 축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기존 정보보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관하고 사이버보안센터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전면에 배치했다. 동시에 그룹 차원에서는 CIB 기능을 강화한 ‘CIB 마켓 부문’을 신설하고, 은행에는 생산적금융을 전담할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기업대출과 투자금융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커질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한금융은 보다 생산적금융에 방점을 찍었다. ‘그룹 생산적금융 추진단’을 출범시켜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기업금융·투자 기능을 통합 관리한다. 신한은행 여신그룹 내에 ‘생산포용금융부’를 신설했고,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여신 확대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자금 배분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엮겠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은 조직 재편의 무게중심을 ‘구조 개편’에 두었다. 기존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나눠 기능을 세분화하고, 별도로 ‘생산적금융부문’을 신설했다. 여기에 ‘신사업·미래가치부문’을 만들어 소비자보호본부와 ESG본부를 함께 편제했다. 수익 창출과 감독 대응을 한 축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우리금융 역시 생산적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은행 IB·기업그룹 내에 투·융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0대 첨단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았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처럼 올해 금융지주 조직개편이 생산적금융에 집중된 배경에는 정책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 흐름을 제어하는 한편, 기업·산업 금융으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높은 계약·부동산 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업대출과 투자금융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기업금융·투자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병행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는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그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소비자보호 기조는 반복돼 왔지만, 이번에는 감독 당국의 실행 강도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민원을 직접 챙기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검사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금융지주로서는 조직 차원의 대응 없이는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한 환경이 된 셈이다.

특히 최근 증시 활성화 기조 속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기업금융과 투자 확대가 곧바로 감독 리스크 증가로 이

## 생산적금융

구분	지주	은행
KB	CIB마켓부문 신설/김성현 부문장 담당	성장금융추진본부 신설
신한	생산적 금융 추진단 발족	생산포용금융부 신설
하나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재편	투자금융부→ 생산적투자본부 재편
우리	생산적금융투자부 신설 매월 회장 주재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 개최	IB·기업그룹에 투·융자 전담 조직 신설

## 소비자·정보보호

KB	정보보호부 IT→준법감시인 산하로 이관 (은행)소비자보호그룹 내 금융사기예방유닛 신설
신한	(은행)소비자보호부 기능 확대
하나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신설 (은행)소비자보호그룹 확대 개편
우리	회장 직속 소비자보호실 신설 (은행)금융사기예방부 신설

어질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생산적금융 확대와 소비자보호 강화는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관리해야 할 과제가 됐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지주 성과 평가의 기준도 달라질 가능성 이 크다고 본다. 단순 이익 규모보다는 기업대출·투자에서의 성과와 함께, 소비자 민원과 금융사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금융은 정부의 핵심 정책 이전다이고, 소비자보호는 감독당국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분야”라며 “금융지주 입장에선 두 영역에서의 성과가 새해 농사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선우·강지수 기자

보험점수 확인

은퇴 설계

소비 분석

숲은 금융재난 찾기

연금 시뮬레이션

노후 설계

부동산&자동차 시세 보기

신용점수 확인하기

마음 건강 기록

내 서재 만들기

놀이터 플레이

독서 습관 만들기

교보·독서·인생·보험

건강 나이 확인



## 보험·자산·독서·건강 관리의 시작 교보로 부터



지금 교보생명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필수안내사항】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주관광시인화인필 0-2510-47 디지털마케팅팀(2025.10.28 ~ 2026.10.27)

## 은행들 한결같이 '머니무브' 고민…

### 예금 금리 올린다고 될까

기예금'을 통해 12개월 만기 최고 연 3% 금리를 제시했다. NH농협은행 역시 'NH올원e예금'을 기본금리 3%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지방은행들은 더 공격적이다. BNK경남은행은 1년 만기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으로 연 최대 4.10% 금리를 내걸었고, 광주은행도 12개월 만기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에 동일한 수준의 최고 금리를 적용했다. 일부 특판 상품은 연 6~7%대 금리를 제시하며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어디까지나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출금리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만 끌어올릴 경우, 이자마진이 급격히 훼손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IMA 계좌의 경우 운용 성과에 따라 안정형 4~4.5%, 일반형 5~6%, 투자형은 6~8%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 예금 상품으로 이 수준을 맞추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IMA가 예금 대체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은행들도 예금 상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수연동예금(ELD)이나 공동구매정기예금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유동성을 중시하다 보니 장기 상품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며 "IMA가 완판되고는 있지만, 상품 구조가 폐쇄적이라는 점은 향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예금 이탈은 은행들의 자금 운용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합산 잔액은 약 950조원이었지만, 연말에는 939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IMA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예금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채 발행을 통한 조달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올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전년보다 늘려 잡

#### 증권사 IMA 상품 및 은행권 3%대 예금 금리비교

증권사	상품명	기준 수익률	만기
한국투자증권	IMA S1	연 4.0%(실적배당)	2년
미래에셋증권	IMA 1호	연 4.0%(실적배당)	3년
은행	상품명	최고금리	만기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3.15%	12개월
BNK경남은행	The파트너예금	3.15%	12개월
전북은행	JB 134 정기예금	3.10%	12개월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3.10%	12개월
신한은행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	3.00%	12개월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	3.00%	12개월
NH농협은행	NH월츠회전예금 II	3.00%	12개월

출처 은행연합회(6일 기준)

으며 유동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장기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지주 차원의 고민도 깊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계열 증권사로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IMA 인가를 받은 곳이 은행 계열이 없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점은 금융지주들에 불리한 대목이다. IMA 경쟁에서 한 발 늦은 상황에서, 은행에서 이탈한 자금을 자사 증권사로 유도할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IMA를 확대할 경우 지주 전체로 보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본 소진과 비율 관리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상품 하나만 놓고 결정하기보다는 지주 전체의 자본 여력과 수익성, 다른 투자 대안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해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지주 입장에선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계열 증권사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라며 "정기예금 금리 인상만으로 머니무브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선우·강지수 기자

32  
300  
280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N  
S  
E  
W  
NE  
SW  
NW  
SE

#### IMA 본격화에 예금 이탈 가속

예금금리 인상은 미봉책

은행채 발행부담 커지고

금융지주 차원에서 전략 고민도 커져

새해 들어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증권사로의 '머니무브(Money Move)'가 뚜렷해지면서 예금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특히 증권투자계좌(IMA)가 본격 가동되며, 은행 예금에서 증권사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끌어올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근본적 해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연초부터 은행권에는 사실상 '특명'이 떨어졌다.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붙잡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증시 활황으로 이미 예금 이탈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IMA 출시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한층 커졌다. 단순한 일시적 이동이 아니라,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구조적으로 증권사로 이동하는 흐름이란 점에서 은행들의 부담은 더 크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사들이 출시한 IMA 상품들은 잇따라 조기 완판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말 선보인 첫 IMA 상품 'IMA S1'은 판매 개시 나흘 만에 1조원을 웃도는 자금이 유입되며 조기 소진됐고,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 IMA 1호' 역시 당초 모집액을 크게 상회하는 약 5000억원이 몰리며 흥행을 이어갔다.

은행들이 선택한 즉각적인 대응책은 금리 인상이다. 주요 시중 은행들은 연 3%대 정기예금, 4%대 적금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1년 만기 기준 연 3.15% 금리를 제공하는 'e-그린 세이브예금'을 출시했고, 신한은행은 '신한 My플러스 정

# 점입가경 쿠팡 사태에 김범석 '반쪽 대응'… 법률 리스크 '산더미'

사과·보상에도 확산되는 논란…정치권·정부 압박 수위↑  
개인정보 유출 넘어 노동·공정거래·세무 이슈까지 겹쳐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향후 규제 강도 가늠자 될 듯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서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른바 '쿠팡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별개로 노동 이슈 등 각종 현안이 잇따라 부각되면서, 이번 사태가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여론과는 별도로 핵심은 결국 법적 책임의 향방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 해외 소송 등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돼 있어, 향후 쿠팡이 맞닥뜨릴 리스크 전개는 정부의 압박 강도와 대응 수위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쿠팡은 12월 29일 인당 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날인 28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장이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히며 이른바 '반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론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보다 쿠팡의 사후 대응 방식에 더욱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안을 두고 정부의 대응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논란이 줄어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은 내부 인력뿐 아니라 주요 로펌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주요 로펌들이 쿠팡의 전반적인 법률 이슈 대응을 맡아온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 등이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민·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 해외 소송 등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돼 있어, 향후 쿠팡이 맞닥뜨릴 리스크 전개는 정부의 압박 강도와 대응 수위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다. 회사 측은 내부 조사 결과 실제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둘러싼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 민사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근로·노동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쿠팡을 퇴직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지정하며 근로자의 상근성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고, 법원이 일부 물류센터 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와 노조 활동 탄압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약관상 면책조항 논란과 함께, 쿠팡이 초 수수료 구조의 불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공정위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색 순위·PB 상품 편향 등과 관련한 기존 반독점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병행되고 있다. 국세청 역시 쿠팡의 국내외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으로, 해외 상장사 구조와 수의 배분 관행을 둘러싼 추가 법적 책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국 상장사로서의 공시 책임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적시에 공시했는지를 두고 미국 증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면서, 현지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는 중대 사고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쿠팡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예외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5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고액 보수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2026년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 본인은 물론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가 적용된다. 자주회사 전환이나 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각종 제약이 뒤따를 수 있어, 쿠팡의 중장기 지배구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를 넘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슈로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범석 의장의 대응 등 쿠팡의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사안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과 별개로 남아 있는 법적 쟁점이 산더미인 상황에서 이미 막대한 규모의 법률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법적 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기자

coupang newsroom

## 쿠팡 김범석 의장 사과문

2025. 12. 28.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 여러분의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쿠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 올해 IPO 조 단위 '대어' 판 열릴까…

## 중복상장 논란은 변수

중복상장 논란으로 대형 기업공개(IPO)가 잇따라 좌초됐던 지난 해와 달리, 올해는 조 단위 대어들이 공모시장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연내 증시 입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가 마련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향방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관측이다.

올해 '조 단위' 상장 후보로는 LS에스솔루션즈와 케이뱅크를 비롯해 무신사, 한화에너지, 구다이글로벌, HD현대로보티스 등이 꼽힌다. 무신사와 구다이글로벌, HD현대로보티스는 상장 후 기업가치로 8~10조원까지 거론될 만큼 기대감이 크다.

눈에 띠는 점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시 IPO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LS에스솔루션즈는 현재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받고 있고, 기업가치 8조원대가 거론되는 HD현대로보티스는 이달 중 주관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두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재무적 투자자(FI)와 상장 시점 조정에 실패할 경우 계약상 올해 하반기까지 상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주관사 선정 이후 상장 절차를 멈췄던 한화에너지 역시 연내 상장 재개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복상장 논란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무신사의 상장 후 기업가치를 10조원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형 로레알'을 내세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구다이글로벌 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 준비를 본격화했다. 구다이글로벌은 이달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두고 있다. 조선미녀·티르티르·스킨1004·스킨푸드 등 다수 브랜드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구다이글로벌 역시 기업가치 10조원 수준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AI 분야에서도 상장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솔라'를 개발한 업스테이지는 KB증권과 미래에셋

지난해 공모 1조원 이상 IPO는 LG CNS 한 건 SK엔무브, 중복상장 논란으로 상장 철회 이후 LS에스스·SK에코·한화에너지·HD현대로보티스 등 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판 열릴' 변수

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 시점을 저울질 중이다. 업스테이지의 기업가치는 2~3조원 수준이 거론된다. 리밸리온, 퓨리온, AI, 릴리트테크놀로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상장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다.

올해 대형 IPO 후보군이 두터워지며 공모시장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공모 규모가 1조원을 넘긴 IPO는 LG CNS 한 건에 그쳤다.

이 배경에는 중복상장 논란의 확산이 있었다. 지난해 초 LG CNS 상장을 계기로 지주사 할인과 계열사 중복상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6월에는 SK엔무브가 중복상장 논란 속에 상장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 CNS는 IPO 과정에서 "물적분할 회사가 아니어서 중복상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 지주사 디스카운트 심화를 지적하는 시각이 확산되며 논란은 오히려 확대됐다.

이후에는 SK엔무브가 중복상장 논란으로 상장을 철회하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는 SK엔무브에 기존 주주 보호 방안을 요구했으나 SK엔무브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재무적 투자자(FI) 지분을 되사들이며 상장은 무산됐다.

SK엔무브 상장 철회 이후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던 대기업 계열사들과 주관사들은 일제히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주관사 선정했던 한화에너지 준비를 멈췄고, 주관사 선정 단계였던 SK 플라즈마 역시 속도를 늦췄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사실상 첫 '대기업 상장 타자'가 될 LS에스솔루션즈로 옮겨졌다. LS에스솔루션즈가 지난해 11월 예비심사를 청구하면서, 멈춰있던 대기업 계열사 IPO에 다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 LS그룹 차원에서 중복상장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에스솔루션즈 상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강한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S에스솔루션즈를 시작으로, 올해 대기업 계열사들의 성공적인 상장은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준비 중인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중복상장 여부는 내부 기준과 정성적 판단에 따라 심사돼 왔지만,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의와 판단 기준을 규정해 담으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거래소는 세칙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재가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가이드라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이드라인에서 중복상장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상장을 대기 중인 다른 대기업 자회사들의 향방도 가려질 전망이다. 한화에너지와 SK에코플랜트가 예비심사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고, HD현대로보티스 역시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LS에스솔루션즈가 무난히 증시에 안착하고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대기업 계열사들의 IPO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무신사와 구다이글로벌처럼 10조원대 가치가 거론되는 기업까지 가세하면 올해 IPO 시장은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빈 기자



# 3차 상법개정이 ADR과 충돌?… 국회가 막을 수 없지만, 주주 설득은 회사 몫

SK하이닉스 ADR 부상하며 '소각 일변도' 원칙 완화

예외 열려도 정관변경·주총표결·이사회 결의 절차 필요  
자사주 5% 이상 상장사 70여곳…지주사 선택지 좁아  
손쉬운 우회 수단으로 비치면 주주 반발·소송 불가피  
"소각보다 나은 주주가치 제고 수단"…주주 설득 싸움

3차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원칙이 일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각을 기본으로 하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이나 인수합병(M&A) 등 예외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논의가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활용하려면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를 통해 주주를 설득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권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예외적 활용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일각에서 소각 외 방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시장 저평가 해소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재산권·경제 활동의 자유와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규율 방식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겠느냐는 전망이다.

'SK하이닉스 ADR'이 화두로 떠오르며 정치권 시각이 다소 유연해졌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동종 업계 글로벌 벤처에 이션과의 괴리를 해소해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 사례가 제시된 덕이다.

실제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글로벌 선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상장 시장과 투자자 기반이 다르다는 이유로 3위 마이크론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다. 양사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멀티플(배수)이 통상 마이크론 절반 정도에 형성돼 왔다. 자사주를 ADR에 활용하면 해외 자금풀을 유치해 가격차를 해소하는 식으로, 단순히 소각했을 때보다 더 큰 주주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처분 규정을 신설하되 소각 중심 체계로 일원화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법 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논리 자체도 명쾌하다. 자사주는 국제회계기준(IFRS) 상 자본 차감 항목인데, 이미 차감된 자본을 최대주주 등 특정 주주 몇처럼 써온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소각만이 답'이라는 식 결론으로 치달으며 ADR이나 M&A 등 다른 주주환원 경로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쏟아졌다.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자체로 기업들의 안고 있는 자사주 처분 부담이 해소되길 어렵다. 지배력 유지·방어와 같은 특정 대주주 이해관계만을 위한 활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더 많은 둑을 돌려주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과제는 그대로 남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라 해서 ADR 발행을 막지 않겠다는 것일뿐 원칙에서 벗어나는 활용을 위해선 주주 동의를 구하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이 우선돼야 하고, 이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게 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번 사들인 자사주는 미발행주식과 동일하니 ▲신주 발행에 준하는 이사회 결의, 공시 등 주주보호 절차를 적용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분 교환을 통한 경영권 방어나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유사시 조달 수단으로서 묵혀두는 행위 등은 대부분 주주 반발에 가로막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주총을 통해 정관 변경을 승인받는 것까진 가능해도 이사회 결의까지 겹겹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를 피하려고 우회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 통과한 개정상법으로도 이사 충실타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주대표소송 위협이 커졌다. 겹겹이 절차를 지켜야 하고, 법률적으로도 기업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라고 전했다.

기발행 자사주가 5~10% 이상 쌓여 있는 기업들로선 고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배력 관리와 무관하고 소각하는 것보다 우월한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소각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자사주 비중이 5% 이상인 국내 상장사는 70여곳에 달한다. 비중이 20%를 훌쩍 넘는 롯데지주나 SK(주)부터 7.5% 수준인 (주)한화까지 대형 그룹사 지주사 및 지주사격 회사 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설을 겨냥해 미국·유럽·홍콩 등 해외 증시에 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대체로 성공 확률이 낮다는 평이다. 글로벌 피어(Peer) 벤처에 비해 저평가 됐고 뚜렷한 대기 투자수요가 있다고 특정할 수 없다면 소각이 싫어 우회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수준은 돼야 DR로 저평가 해소에 나선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당장 시장성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경우 교환사채(EB) 발행에 사용하거나 증권사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B나 PRS는 지난 2년 동안 조달 금리를 낮추거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쓰여왔다. 당장 자금 수요도 크지 않고, 마땅한 투자처도 보이지 않는데 자사주를 값싼 조달 수단처럼 쓰려고 하면 주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다.

대기업 재무팀 한 실무자는 "작년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자사주로 EB를 찍으면서 이사회에서 근거 자료를 만들고 외부 자문을 받느라 진땀을 뺐다"라며 "수년째 적자인 데다 자체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 별 문제는 안 됐지만, 법 개정 후로는 허들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 동안 M&A나 신사업 투자 성과가 전무한데 주가 관리마저 소홀했던 기업들이 가장 곤란해질 거란 시각도 있다. 자회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 지주회사 중 승계 전략이 필요한 곳은 외통수에 놓였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자사주 소각으로 당장 현금이 유출되는 등 재무 타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쌓아둔 자사주 비중 만큼 중장기 자본정책 옵션이 통째로 사라지고 단기적으로 주가만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고위임원은 "사업 회사들의 경우 M&A나 신사업 투자처를 만들어내서라도 자사주 사용처를 마련하려 분주한데, 지주사들은 주가만 오르면 골치 아플 것"이라며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언젠가 써먹을 요량으로 자사주를 쥐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플랜B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서 입장이 갈린다"라고 말했다.

A woman with short dark hair and bangs, looking thoughtfully upwards. In the foreground, a computer monitor displays a mobile banking app interface for Shinhan Bank, showing a conversation with an AI agent and a currency conversion tool. The background is a blurred landscape with a blue sky and clouds.

# 건설업계, PF 만기 리스크 올해 본격화한다

22~23년 대출, 올해 대거 만기 도래  
정부 “금융사 건전성 관리 강화 예정”  
선제적 유동성 확보 더 중요해질 올해

올해 건설업계는 만기가 잇따라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PF 만기연장이나 차환(리파이낸싱)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경기 침체 우려에 PF 투심 회복을 선불리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PF 시장이 급랭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이뤄진 대출의 만기가 시기적으로 올해 집중된다는 점이다. 작년 4분기에 만기 도래한 PF 채권 잔액만 13조4800억원이다.

금융당국의 PF 정리·재구조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대주의 사업성 평가가 더욱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만기연장 등으로 연명하던 사업장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크다.

금융당국이 작년 12월말 개최한 'PF 상황 (6차) 점검회의'에 따르면 9월말 PF 익스포저는 177조9000억원이다. 2023년 말 231조 1000억원 이후 6개 분기 연속 감소 추세다.

그러나 9월말 연체율은 4.24%로 작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증권사의 연체율이 27.7%로 특히 높은데 브릿지론의 연체율은 51.4%에 육박한다.

9월말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 비중은 10.2%로, 평가 기간 9.5~11.5% 범위에서 등락을 보였다. 같은 기간 부실우려 여신 비중만 보면 7.5%로 하락 추세지만, 여전히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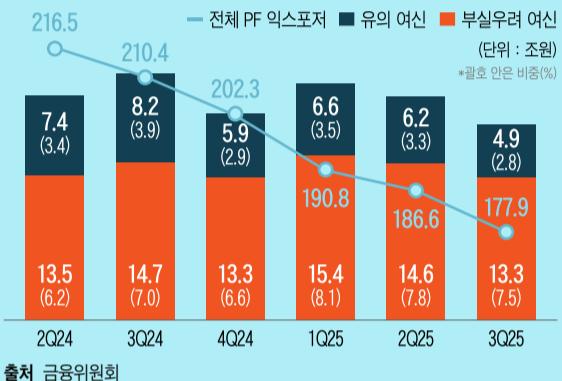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올해 생존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10대 건설사마저 부채비율이 200%에 육박할 정도로 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10대 건설사 대다수는 작년 초 주요 과제가 부채비율 감소였지만 일부 건설사는 되레 증가했다. 중대재해의 여파도 큰 상황이다. 이들은 자회사 매각, 그룹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도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특히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의 경우 연간 약 3조 6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다.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건설산업이 부진하며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일 거라 내다보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건설업은) 구조적인 침체 국면에 머무르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할수록 장기 미착공 및 부진한 분양성과를 보이는 사업장의 경

## 분기별 PF 익스포저 및 유의·부실우려 여신



우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점차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PF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 10건 중 9건의 조치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전문가의 말을 빌려 '부동산 PF 시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 초장기전 접어든 고려아연 분쟁… 영풍·MBK 연합, 출구전략 고민할 때?

美정부 끌어들인 최윤범 회장, 연합과 지분 대등해져  
연합의 이사회 장악, 내년 기대됐지만 예측 '안갯속'  
이기려면 막대한 돈·시간 필요…전략 다시 고민할까  
수익성 문제 크지 않아…신뢰 회복 및 명분 확보 전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햇수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자금력과 명분을 앞세워 우위를 점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대응할 수를 찾는 양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시간은 연합의 편이란 시각이 많았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해가 거듭할수록 이사회의 무게추가 연합 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미국 대규모 제련소 건설 계획과 함께,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합작사(Crucible JV)를 대상으로 3조원 가까운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회장은 단숨에 10% 이상의 새 우호주주를 맞으며 연합과의 지분율을 2%포인트 이내로 좁혔다.

연합 측은 이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거치분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발행가액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신주 발행 변경 등기 지연 등 문제도 제기됐으나 흐름을 돌리기엔 부족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대등한 표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연합이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6명 중 네석을 차지할 경우 이사회는 1석 차이로 좁혀지고, 2027년 이후부터는 역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 변수로 상황이 달라졌다. 2027년 주주총회부터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석을 3%룰을 적용해 선임한다. 우호 주주가 많은 최 회장에 유리하다. 해를 거듭해도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긴 어려워진 셈이다.

연합이 다시 이전의 우위를 되찾기 위해선 결국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양측의 우호주주와 국민연금, 블랙록과 뱅가드 등 투자사를 제외하면 유통 물량이 적다. 지금부터 다시 8%가량의 지분을 사모하고 이사회 의석을 늘려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

사실 연합 측은 수세에 몰린 최윤범 회장이 꺼낼 카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될 것이라 점은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전략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앞으로 지분을 늘려가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10년 대계를 내다봤다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두 나라가 낀 기업을 흔들기도 부담스럽다.

연합 입장에서는 중대한 변수가 생긴 만큼 향후 전략을 재점검할 만한 상황이 됐다.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수도 아니면 면출 방도를 찾을 수도 있다. 연합은 작년 하반기에도 꾸준히 고려아연 지분을 매집하고 있었지만 유상증자 발표 후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만일 연합이 분쟁을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더라도 수익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지금도 100만원을 넘어 유지되고 있다. 공개매수(주당 83만원)에 추가 매수 가격까지 감안해도 매각 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 변화 전망

(단위 : 명)

구분	2025년	2026년 주주총회 이후			2027년 주주총회 이후			2028년 주주총회 이후			
		임기 만료	선임	결과	임기 만료	선임	결과	임기 만료	선임	결과	
최윤범 회장 측	일반 선임	10	-5	3	8	-5	5	8	-3	3	8
	분리 선임	1			1	-1	2	2			2
	직무정지	4			4	-4					
	합계	15			13			10			10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	4	-1	3	6	-3	6	9	-3	3	9	

출처 메리츠증권

물론 연합이 지분을 시장에 팔기 시작하면 '경영권 분쟁' 소재는 사라지고 주가는 오버행 부담에 놀릴 수 있다. 매각 작업을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려 수행할 수밖에 없다. 반면 분쟁 종료로 인해 회사의 재무부담이 완화되고 주가와 주주가치에 득이 될 것 이란 낙관론도 있다.

고려아연 측과 출구전략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안도 고려할 만하다. 연합 측 지분을 회사가 사주거나 제3의 투자자가 인수하는 식이다. 분쟁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가치에 주목하는 미국 기업이 많아졌다는 후문이다. 자문 업계에선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거래 일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M&A 업계 관계자는 "연합이 지분을 줄이기 시작하면 분쟁이라는 테마가 사라지지만 회사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심 광물 수요가 많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을 타진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양측의 신뢰 회복이 전제다. 1년여의 진흙탕 공방으로 양측의 감정은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태다. 견원지간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꼼수에 분노해왔던 MBK파트너스가 반색하며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뜻을 모으려면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합은 회사의 문제를 알리는 데 기여했고, 회사는 그간의 제안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발전시켜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실제 연합이 움직인 후 최윤범 회장의 무리한 경영 행보가 세상에 알려졌다.

과거 MBK파트너스는 UCK파트너스와 손잡고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에 나선 바 있다. 먼저 들어와 있던 행동주의펀드 KCGI의 존재가 걸림돌이었다. 인수자 측은 KCGI의 캠페인이 경영권 매각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고, 얼마 후 KCGI는 투자자(LP) 선관주의를 명분으로 투자회수를 결정했다.

연합 내 역학관계는 변수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의 협력 구조를 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이 더 필요한 곳은 영풍이고, MBK파트너스는 회수가 최대 목표다. 영풍은 미국 변수가 대수롭지 않지만, 미국 LP가 많은 MBK파트너스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연합 내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오는 10월(공개매수 완료 2년 후)은 이사회 과반확보 중 앞선 날) MBK파트너스는 영풍 측 지분 일부를 현 주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사울 권리(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MBK파트너스는 한결 여유를 갖고 전략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연합과 화해 논의를 하 고 있지 않지만 주주총회에서 원하는 바를 얻으면 화해 협상을 해보자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며 "MBK파트너스도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더 여유로운 위치를 점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상호 기자



# KOREA ZINC





# 인력 충원이 딜 호황으로 이어질까… JP모건發 외국계 IB 성과 ‘시험대’

작년에 이어 올해 한국 M&A 전담 인력 보강 나서  
JP모건 선제 인력 충원, 딜 증가 국면에서 시험대  
작년 리그테이블 선방…올해도 ‘IB 귀환’ 이어질까

지난해 대규모 인력 충원으로 업계의 이목을 끈 JP모건이 추가 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의 ‘귀환’이 두드러진 데 이어, 올해에도 크로스 보더를 중심으로 한 대형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지난해 M&A 등 거래가 급증한 미국에서는 다가올 호황을 대비해 월가 투자은행들의 뱅커 인력 확보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국내에서도 인력 확충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 관련 M&A를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워킹 레벨 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전까지는 커버리지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 관련 인력을 늘려 왔으나, 현재는 M&A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 충원이 마무리 되면 커버리지팀을 포함해 한국 관련 거래를 담당하는 인력은 50명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앞서 JP모건 서울지점은 지난해 초 25명의 신규 인력을 한꺼번에 영입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입 대상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글로벌마켓증권, 골드만삭스 등 경쟁 외국계 투자은행(IB) 소속 주니어 인력이 주를 이뤘다.

당시 국내 IB 업계 전반에서 영업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던 만큼, 이례적인 대규모 인력 충원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을 둘러싼 관심이 제기됐다. 다만 약 1년이 지난 현재 JP모건 내부에서는 선제적인 인력 확충이 늘어난 딜 업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손 부담을 완화하며 일정 부문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베스트조선 집계에 따르면 JP모건은 2025년 연간 리그테이블에서 2위를 차지했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거래를 비롯해 DIG에어가스, 테일러메이드 등 대형 M&A 매각 자문을 맡았고, 무신사 기업공개(IPO) 거래에도 참여했다. 조솔로 한국 IB 대표와 장태원 북아시아 M&A 공동총괄이 이 거래들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M&A팀 추가 인력 보강은 최근 딜 파이프라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 관련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절대적인 딜 수가 늘어나면서 드물게는 손이 부족해 거래를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업계 전반에서 인력 충원을 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과 IB는 딜 규모나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역할과 쓰임이 서로 다른 만큼, 각자 다른 시장에서 거래 볼륨을 키워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M&A 호황과 IPO 확대를 배경으로 JP모건을 비롯한 월가 투자은행들이 인력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섰다. 2021년 이후 지난해가 M&A와 자본조달 등 거래 성과가 가장 좋았던 해로 평가되면서, IB들이 다가올 호황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올해 국내에서 외국계 IB의 ‘먹거리’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는 대형 거래의 구조적 특성이 꼽힌다. 조단위 이상 대형 M&A의 경우 거래 성격상 해외 투자자와의 협업, 복잡한 크로스 보더 구조 설계가 필수적인 만큼 외국계 IB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2~3년 국내 M&A 시장을 이끈 회계법인과는 업무 영역이 다르다.

실제 지난해 DIG에어가스 거래와 SK이노베이션의 LNG 사업 유동화 등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거래를 비롯해 주요 대형 거래들은 대부분 외국계 IB가 주관했다. 인베스트조선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M&A 주관 순위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외국계 IB였다.

국내 대기업들의 거래가 대체로 크로스보더 아웃바운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글로벌 IB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대기업들도 점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을 인수했다. JP모건이 해당 거래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향후에도 삼성전자가 크로스보더 아웃바운드 딜을 중심으로 M&A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SK그룹은 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추가로 이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가 본격화된 데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SK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추가 투자 수요도 남아 있다. LG그룹 역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꾸준히 해외 M&A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PEF) 업계는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계 PEF를 중심으로 국내 투자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국내사가 진행한 조단위 PEF 거래는 글랜우드PE가 무바달라와 인수한 LG화학 수처리 사업이 사실상 유일했으며,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환경 역시 외국계 자본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PEF 가운데서는 EQT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EQT는 지난해 리멤버앤컴퍼니와 더존비즈온을 잇따라 인수했으며, 이후에도 수익성이 검증된 ‘알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맥쿼리그룹의 행보도 주목된다. 맥쿼리는 지난해 DIG에어가스를 매각했고, 연초에는 LG CNS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키며 회수 속도를 높였다. 현재는 아프로티움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맥쿼리가 올해 새로운 투자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보령 LNG 터미널 인수, 울산 GPS 투자 유치 등 인프라 딜에 참여한 바 있다.

연초부터 대형 매각 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세아의 제지사업 통매각 거래의 경우 UBS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DL케미칼은 특수 라텍스 생산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사를 계속 물색하는 분위기다.

이상은 기자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시니어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위한  
하나금융그룹만의 솔루션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하나더넥스트**  
**랩 시리즈**안정적인 삶을 위한 균형잡힌 투자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 ♦ 은퇴 전/후 손님을 위한 미래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

**하나더넥스트 K배당재투자랩**

랩 수수료 | · 선취형: 선취 0.6%, 후취 연 1.2% · 기본형: 후취 연 1.5%

**하나더넥스트 글로벌인컴랩**

랩 수수료 | · 선취형: 선취 0.8%, 후취 연 1.0% · 기본형: 후취 연 1.5%

## 랩상품 Point

- 안정성 추구 전략으로 수익 다각화
- AI 알고리즘을 통한 투자 최적화 추구
- 손님 니즈에 따른 투자 지역 선택 가능(국내 / 해외)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는 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0164호(2025.01.17~2026.01.16), CC브랜드250117-0267

하나증권